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

윤 광 재(Yun, Kwang Jai)** · 김 윤 수(Kim, Yun Su)***

ABSTRACT

The issue of corruption has been over decade, and many scholars carefully expect it will become continuous. Usually, the corruption is conceptualized by the gaining personal benefits or profits through abusing personal standing and authority. Recently, since many researches have been focusing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rruption and social componen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conclusively argue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but alternatively there is certain evidence which provide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capacity of public finance measured by global public finance index. That is, the study cannot argue tha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considering indirect ways towar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out public finance capacity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So, the government surely makes an effort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way of achieving governmental efficiency and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corruption.

Key word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mpetitiveness of nation, governmental efficiency, public finance

I. 서론

한 국가내에서 부패의 원인과 형태가 상이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다시 말해, 정부, 산업, 사회내에서 부패의 문제는 폭넓고 깊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심각한 부패가 있는가 하면 경미한 부패가 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다(윤태범,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교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개발본부 박사

2001, 74).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부패는 주변에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간 오래 동안의 논쟁거리였으며 누가 그 의미를 결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부패의 정의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부패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패행위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는 수많은 원인에서 비롯되고 매우 다양한 패턴과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부패는 쉽게 규정할 수 없고 음모적인 성격 때문에 측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패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systematic manner)하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Caiden, 2001: 18,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enk(1989: 110)에 의하면 가장 넓은 의미하에서 부패는 권력의 부절적하고 이기적인 이용, 공무원이나 특별직위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뇌물자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Klaveren(1989: 25)도 부패는 일상생활에 있어 직위를 활용하여 기타 소득을 얻는 부정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Johnston(2005: 11)은 부패란 공권력(public power)을 활용한 신뢰의 남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부패는 항상 금전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는 일정한 직위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의 취함에 있다는데 공통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관행화된 부패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의한 소수의 대형비리(grand corruption)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여 총비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민이 저지르는 다수의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가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본다(고길곤·이보라, 2012: 406).

이제, 지역과 국가에 따라 부패는 하나의 성장산업(growth industry)이라 칭할 정도가 되었다(Quah, 2001: 133). 이것은 부패의 정도나 종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패의 경제적 비용은 높고 지속적인 부패는 발전에 유해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만든다. 부패는 투자, 사회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의 세출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한다(Halim, 2008: 237). 결국, 부패는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한 Bentzen(2012)은 부패는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에 의미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며 강희복(1997)은 청렴한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패한 국가가 결코 국가경쟁력이 강한 국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부패는 한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 논의하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국,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패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인식수준은 높고 국가경쟁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부패인식수준도 낮다는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1. 부패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

서론에서 부패의 정의에 대해 일부 논의하고 있고 이어서 다른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패라는 것은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misuse of public power)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익은 돈과 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신분의 향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Lambsdorff, 2007: 16). 이 밖에도 부패는 공공의 시각을 벗어난 돈, 자산, 권력의 취득으로 불법적이며 규모가 큰 부패이거나 규모가 작은 부패이거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부패로 인해 개인적 이득의 취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고 한다(Cockcroft, 2012: 2). 그리고 Glaeser & Goldin(2006: 7)에 의하면 부패의 3대 핵심요소로 다음과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봉급이외의 금전발생, 금전발생에 따른 법률적 또는 사회적 규범의 위반, 이러한 위반에 따른 일반대중의 손해이다

Klitgarrd(1988: 26)는 경제학 이론을 빌려 사회적으로 부패비용(cost of corruption)과 부패제거비용(cost of removing corruption)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초기의 부패단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지만 부패가 악화될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초기의 부패단위는 적발하기 어려워 부패제거비용은 매우 높지만 부패가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되면 적발하기 쉬워 부패제거비용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부패제거를 위한 자원이 낭비되고 외부불경제와 같은 부의 공공재(public bads)가 만들어지고 정책을 왜곡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게 된다(Klitgarrd, 1988: 46).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에 부패는 인간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의 병리적 상태나 변형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제도하에 수반되는 비정상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Jacoby et al, 1977: 146).

산업계에 있어서 부패뇌물의 공여는 지난 20여년 동안 계약단가에 있어 5%에서 30%에 이르는 비용을 초래하게 만들었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분야에서는 있어서는 45%의 비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무역에 있어 뇌물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 1조 달러로 이는 전체 20조 달러의 약 3%에 이르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Kochan & Goodyear, 2011: 1). 그러나 부패의 측정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한 정의만큼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부패는 투명하지 않은 만큼 관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패를 볼 수 없는 만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기에 부패를 측정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며 많은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Uslander, 2008: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ices)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Goel & Nelson, 2011: 156). 부패인식지수는 부패활동의 순수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유용한 측정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부패인식지수는 가장 잘 알려진(the best-known index) 유용한 지수로써 Gupta et al.(1998), Alesina & Weder(1999), Treisman(2000) 등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Desarrollo, 2012: 144).

현재까지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에 대한 동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실제평가기관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정환, 2007: 50). 국가경쟁력 평가기관 중의 하나인 국제경영연구소(IMD)는 매년 국가경쟁력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국가가 기업의 더 많은 가치창출과 국민의 더 많은 번영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윤광재, 2004: 71).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경쟁력은 개방적이고 통합된 세계경제하에서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가의 핵심적인 사항이다(WEF, 2007: 51).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일부 연구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하위요소들의 구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한 연성자료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표본설계의 대표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길곤·박세나, 2012: 60). 또한, 국가경쟁력의 순위의 격차발생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수체계 전방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자본수준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거버넌스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영출, 2009: 62).

2. 선행연구 검토

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게 되면 기존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부패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시켜 왔다. 국내에서 윤태범(2001)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 존재의미를 찾고 있으며 이는 바로 정부-시민사회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민사회의 신뢰받는 대리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영균(2004)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부패발생원인과 반부패수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구성요소간 균형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의식과 행태변화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배정아(2006)는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실제 부패현황을 업무부분별로 분석하고 있다. 반부패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실화, 공익신고 현실화, 공개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는 부패방지 및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나 현황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일반적인 연구이외에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윤광재(2005)와 배정환(2007)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전자의 연구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부패인식도 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간의 관계가 비례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는 부패지수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부문별 하위지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요소를 연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De Graaf(2007)는 기존의 문헌을 통해 부패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의 부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우발적 부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조적 접근방법보다는 상황적 맥락에 입각한 부패접근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Lambsdorff(2007)는 주인-대리인모형(Principal-agent Model)하에서 대리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리인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대리인에게 세금과 행정적 비용을 지급하면서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Halim(2008)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관료부패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선거에 대한 책임성이나 법률적 엄격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정치인을 양성하고 이러한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모니터하게 되면 관료부패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연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부패의 연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패와 다른 사회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종순·장지원(2009)은 우리나라의 정부규모와 부패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부패는 다른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길곤·이보라(2012)는 부패와 사회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인식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부패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Esty & Porter(2002)와 Welsch(2004)는 부패와 환경의 질, 부패와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패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낮고 환경규제의 효율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Warren(2004)은 부패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동안의 연구미흡은 규범적 이슈의 부족이 아닌 부패와 민주주의간의 연결고리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분명히 부패는 민주주의의 손실(deficit of democracy)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Desarrollo(2012)는 부패와 분권화규모(size decentralization)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역의 법률이나 규제에 독점적인 권력(monopolistic powers)이 강하면 강할수록 뇌물이나 부당취득의 유혹이 강해지고 특히, 통제나 책임기구가 전국적 수준보다 미약할 때 작은 지역의 선출직 장이나 공직자들이 부패에 보다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규명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연구자	내용	비고
윤태범(2001)/ 이영균(2004)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패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 존재의미를 찾음/부패방지를 위한 구성요소간 균형체재 유지, 사회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의식과 행태 변화노력을 제시함	시민사회 강화 연구/부패의 원인연구
조선일·배정아 (2006)	반부패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실화, 공익신고 현실화, 공개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마련	반 부 패 정 책 연구
윤광재(2005)/ 배정환(2007)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패방지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부패인식도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가 비례형태로 나타남/부패지수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부문별 하위지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부 패 지 수 와 국 가 경 쟁 력 관 계 연구/국 가경쟁력 강 화연구
De Graaf (2007)/ Lambsdorff (2007)	개인의 우발적 부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구조적 접근방법보다는 상황적 맥락에 입각한 부패접근법이 요구된다는 것임/주인-대리인모형하에서 대리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음	개인적 부패 연구/부패발 생 원인연구
Halim (2008)	관료부패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선거에 대한 책임성이나 법률적 엄격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정치인을 양성하고 관료부패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임	관료부패 실 증적 연구
진종순·장지원 (2009)/ 고길곤·이보라 (2012)	정부규모와 부패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부패는 다른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음/부패와 사회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인식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부패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정 부 규 모 와 부패수준 연 구/부패와 개 인 부패성향 연구
Warren(2004)	부패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분명히 부패는 민주주의의 손실중의 하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부패와 민주 주의 연구
Esty· Porter(2002) Welsch(2004)	부패와 환경의 질, 부패와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패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낮고 환경규제의 효율성이 낮다고 분석함	부패와 환경 의 질, 환경 규제 연구
Desarrollo (2012)	부패와 분권화규모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역의 법률이나 규제에 독점적인 권력이 강하면 뇌물이나 부당취득의 유혹이 강해짐	부패와 분권 화규모 연구

3. 분석틀 설계

최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게 되면 부패와 다른 상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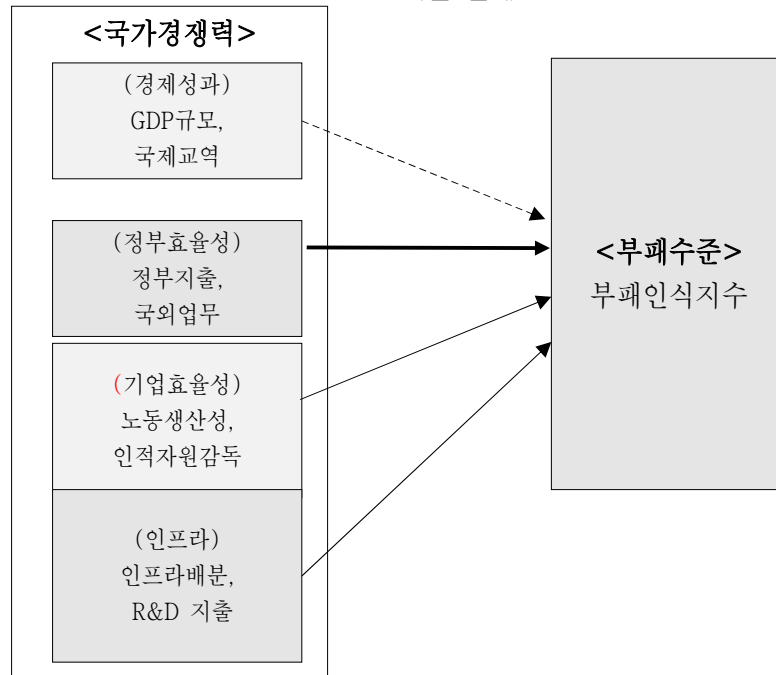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있어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 순위간의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와 부문 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관계가 깊고 낮은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부패와 관련된 지수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 기존에 Gupta et al.(1998), Alesina & Weder(1999), Treisman(2000)을 비롯한 학자가 사용하고 그 타당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국가경쟁력 지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경영개발연구원은 국가경쟁력 지표를 경제성과분야, 정부효율성분야, 기업효율성분야, 발전인프라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각각의 분야를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총 333(79, 70, 71, 113)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IMD, 2013: 8-15)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기본조건, 효율성 제고장치, 혁신의 정교화로 구분하여 다시 각각 4개, 6개,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10개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서인석·권기현·이동규, 2009: 30). 그러나 경영개발연구원에서는 1989년부터 25년 동안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행하여 이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를 위해 2001년¹⁾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순위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하위분야인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발전인프라의 순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경제성과분야는 국내경제, 국제교역, 국제투자, 고용이고 정부효율성분야는 공공재정, 정부일반지출이다. 기업효율성분야는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을 고려하고 인프라 분야는 기본인프라, 과학인프라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D 세계경쟁력연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별로 살펴볼 때 경제성과로 GDP규모(\$billions), 상품서비스 수출규모(Exports of goods & commercial services)로 측정하였고 정부효율성 분야로는 일반정부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 billions)과 GDP 대비 국외지출(General Government Foreign Dept: of GDP)로 선정하였다.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과 인적자원감독규모(Human Resources Director)로 측정하였고 인프라 분야는 인프라 배분수준(Distribution infrastructure)과 전체 R&D 지출규모(Total expenditure on R&D)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지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국내경제(Domestic Economy),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정부(Government), 재정(Finance), 인프라(Infrastructure), 관리(Management),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인적 자원(People)의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분석틀 설계



III.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분석

1. 기초분석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1년 그리스와 함께 42위에 위치하고 있어 총 91개 국가에 있어 중간수준에 해당되고 있다. 반면에 2001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8위에 위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하면 40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09년과 2010년에 39위를 하면서 30위권에 진입하다가 다시 40위권 중반대로 낮아졌다. 한편,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35위와 38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항상 2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2>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순위변화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부패인식지수 순위	42	40	50	47	40	42	43	40	39	39	43	45	46
국가경쟁력 순위	19	24	18	49	43	41	29	31	27	23	22	22	22

국가경쟁력 하위분야에 있어, 다시 말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발전인

프라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씩 상이하다. 경제성과분야의 순위는 2004년 40위권 후반대로 급격히 낮아져 40위권에 머물다 2010년을 기점으로 2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효율성분야는 2006년 47위로 급락하다가 그 이후 30위권에 머물다 2010년 20위권으로 올라서고 있다. 기업효율성분야에서는 정부효율성분야와 유사하게 2006년 45위로 낮아졌고 2009년 이후에 2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다시 30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발전인프라분야에서는 2001년의 34위와 2003년의 11위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2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표 3> 국가경쟁력 하위분야의 순위변화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경제성과분야	19	24	18	49	43	41	49	47	45	21	25	27	20
정부효율성분야	31	25	18	36	31	47	31	37	36	26	22	25	20
기업효율성분야	31	27	20	29	30	45	38	36	29	27	26	25	34
발전인프라분야	34	28	11	27	23	24	19	21	20	20	20	20	19

2. 기초통계량

부패인식지수는 물론 국제교역부문 순위, 공공재정부문 순위,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 발전인프라분야 순위, 기술인프라부문 순위, 과학인프라부문 순위, 보건환경인프라부문 순위, 교육인프라부문 순위 등을 살펴본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12년간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부패인식지수는 평균 42위로 가장 높은 순위는 39위이고 가장 낮은 순위는 50위로 나타났다. 국제교역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0위에서 45위 순위로 평균 30위이며, 기업효율성 분야는 20위에서 45위 사이로 평균 30위 수준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인프라부문은 11위에서 34위 수준이며 기술인프라부문, 과학인프라부문, 보건환경인프라부문, 교육인프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위변화의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국제교역부문이고 다음으로 교육인프라부문의 순위의 변동폭이 컸다. 우리나라는 과학인프라부문과 공공재정부문이 가장 순위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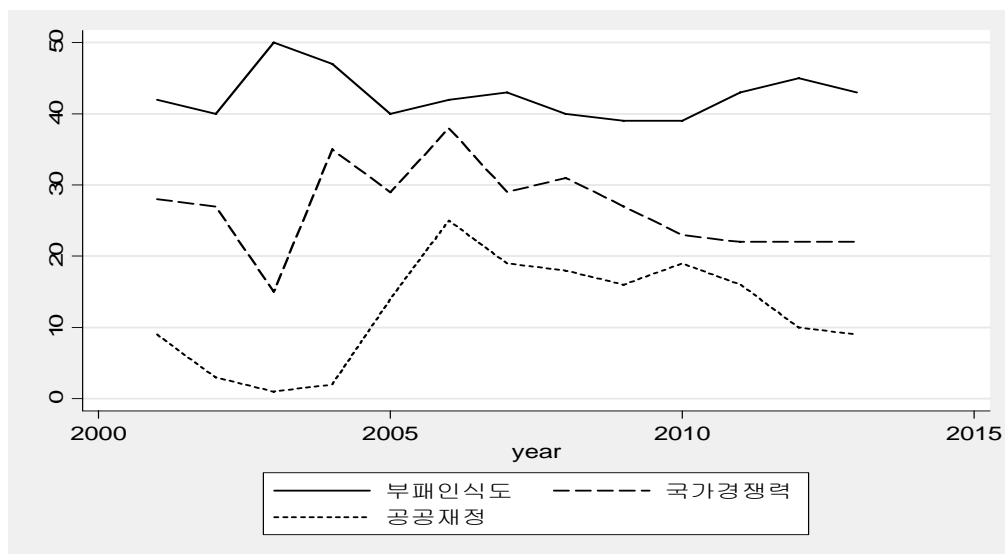
IV.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1. 부패인식지수의 변화추이 분석과 상관분석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면 40위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공공재정부문의 재정순위는 부패인식지수와 다르게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지면 공공재정부문 순위는 낮아지고 부패인식지수가 낮아지면 공공재정 부문순위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재정부문은 순위가 10위내에 머무르다가 다시 20위로 낮아지고 있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공공재정부문에서 많은 기여를 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한 국가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Rayp & Van De Sijpe, 2007: 374), 정부지출과 부패와의 연계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화추이



2001년과 201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GDP규모는 평균 8,000억 달러 규모이며 일반정부지출은 1820억 달러 수준이다. 외국을 상대로 하는 정부부서의 지출규모는 GDP의 2%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측정지표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DP규모(\$billions)	13	422.20	1129.60	792.56	246.88
상품서비스 수출규모	13	179.83	656.95	379.35	168.75
일반정부지출(\$ billions)	13	87.40	245.12	182.05	57.68
GDP 대비 국외지출(%)	13	.72	3.92	2.08	1.30
노동생산성	13	16.56	26.60	21.39	3.80
인적자원감독규모	13	61,441	148,069	107,320.92	31,607.74
인프라 배분수준	13	4.83	7.78	6.65	.95
전체 R&D 지출규모	13	10,028	37,935	23,253.54	10,285.59

부패인식지수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이전에 부패인식지수와 연관되는 인적자원감독량, GDP 대비 국외지출규모, 상품서비스 수출규모, 노동생산성, 일반정부지출, 인프라 배분수준, 전체 R&D 지출규모, GDP 규모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부패인식지수와 GDP 대비 국외지출규모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그 외 인적자원감독량, GDP 대비 국외지출규모, 상품서비스 수출규모, 노동생산성, 일반정부지출, 인프라 배분수준, 전체 R&D 지출규모, GDP 규모는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표 5> 부패인식지수의 상관분석

구분	부패인식 지수	GDP 규모	상 품 서 비 스 수출	일반정부 지출	GDP 대비 국외지출	노동 생산성	인적자 원감독	인프라 배분
GDP 규모	.946**							
상품서비스 수출	.886**	.952**						
일반정부지출	.952**	.953**	.895**					
GDP 대비 국외지출	-.967**	-.934**	-.859**	-.970**				
노동생산성	.844**	.843**	.931**	.845**	-.816**			
인적자원감독	.973**	.987**	.950**	.957**	-.938**	.873**		
인프라 배분	.836**	.811**	.829**	.824**	-.821**	.839**	.825**	
전체 R&D 지출	.912**	.927**	.958**	.937**	-.885**	.935**	.949**	.881**

주 *p<0.1, **p<0.05, ***p<0.01

2. 부패인식지수의 회귀분석

1) 국가경쟁력에 따른 부패인식지수 회귀분석

국가경쟁력을 독립변수하여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6>에서 R² 는 0.605로써 60.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F값은 16.858로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평가가 0.039 높아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가 1수준 높아진다.

<표 6> 국가경쟁력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R ²	F
	회귀 계수	표준오차				
상수	2.565	.613	4.182	.002	0.605	16.858
국가경쟁력	.039	.009	4.106	.002		

주: *P< 0.1, **P<0.05, ***P<0.01

2) 국가경쟁력 하위지표에 따른 부패인식지수 회귀분석

부패인식지수는 종속변수로 우리나라의 국가거시지표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형1에서는 부패인식지수와 연관되는 인적자원감독량, GDP 대비 국외지출규모, 상품서비스 수출규모, 노동생산성, 일반정부지출, 인프라 배분수준, 전체 R&D 지출규모, GDP 규모를 요소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적자원감독량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2에서는 부패인식지수와 연관되는 인적자원감독량, GDP 대비 국외지출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감독규모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국외 정부업무 지출규모와의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y = \alpha + \beta x_{\text{공공행정부분}} + \gamma x_{\text{기업효율성}} + \delta d_{\text{발전인프라}}$$

부패인식지수 = 4.474 + (0.0000009)인적자원감독규모 - (0.182) GDP 대비 외업무지출량

모형3에서는 부패인식지수와 연관되는 인적자원감독규모만 살펴보았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감독이 많을수록 부패인식지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데 다음의 <표 7>에서와 같이 모형2, 모형3의 분석에서 모두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고 모형1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다.

$$\text{부패인식지수} = 3.342 + (0.0000016)\text{인적자원감독규모}$$

<표 7> 부패인식지수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표준오차)	VIF	계수 (표준오차)	VIF	계수 (표준오차)	VIF
경제 성과	GDP 규모	-0.001 (0.001)	144.641				
	상품서비스 수출	-0.001 (0.001)	73.057				
정부 효율 성	일반정부지출	-0.001 (0.004)	67.217				
	GDP 대비 국외지출	-0.184 (0.115)	30.433	-0.182** (0.063)	8.370		
기업 효율 성	노동생산성	0.006 (0.030)	17.317				
	인적자원감독	2.34E-5** (0.000)	89.352	9.00E-6*** (0.000)	8.370	1.60E-5*** (0.000)	1.000
인프라	인프라 배분	0.056 (0.074)	6.653				
	전체 R&D 지출	-7.60E-6 (0.000)	68.466				
(상수)		3.618** (0.854)		4.474*** (0.402)		3.342*** (0.128)	
F		545.774		166.192		193.505	
R-squared		0.989		0.971		0.946	
Adj R-squared		0.968		0.965		0.941	

주 *p<0.1, **p<0.05, ***p<0.01

3. 종합분석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와 관계에 있어 상관관계를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관계이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패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부패인식지수와 인적자원관리감독간의 관계에 있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인적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부패인식지수는 높아진다. 반면, 외국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GDP비율이 높아지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반면 인적자원감독에 대한 지표이외의 하위수준의 측정지표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부패인식지수와 세부기준의 국가경쟁력지수간 연계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속에서 존재하는 부패가 어느 정도 인식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지수이다. 반면에 국가경쟁력 지수는 분야와 부문별로 구분되어 총 33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쟁력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기업의 가치창출과 국민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패라는 부문을 많이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분야나 여러 부문 지표 중에서 부패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 정부효율성분야의 제도적 여건부문에 있어 총 13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뇌물과 부패(bribing and corruption)라는 측정항목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도 주차원의 부패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화, 경제적 풍요, 인구수, 대중매체, 주정부지출, 법집행, 이웃국가의 영향, 연방정부수도의 근접성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의 6개 지표는 부패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나머지 2개의 지표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Goel & Nelson, 2011, 155). 이처럼 측정지표의 설정과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를 통해서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어렵고 다만, 부패인식수준이 높은 국가가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만이 예외적인 상황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패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연계되어 있고 척결해야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부패의 문제를 인식하여 심각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Bentzen, 2012: 167) 또한, 부패는 비효율적인 행정적 기반시설에서 기회가 증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영균, 2004: 251). Bentzen은 부패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영균도 효율적인 행정관리 능력향상은 부패의 기회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패의 척결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향상시키는 전반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V.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는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에 비해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 순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패인식 수준에 비해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거나 반대로 국가경쟁력 수준에 비해 부패인식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부패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Uslaner(2008)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부패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이득을 주고 국민의 일부자원이 일부 엘리트의 자원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공공지출을 위한 재원이 감소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부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저하되고 정부의 비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경로가 정착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패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나마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부패인식지수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내의 여러 지표 중에서 부패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부패방지관련 정책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부패해소를 위한 정책은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인지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각 행정기관에서 내부고발 운영방식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부패방지 및 부패예방을 위한 정책적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국민전체가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부패방지관련 법의 엄격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부패와 관련

하여 부패제공자보다는 부패수용자에게 보다 큰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패와 관련해서는 부패제공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해서 부패수용자뿐만 아니라 부패제공자에 대해서도 부패예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반부패사회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반부패 민간부분과의 협력과 협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도는 있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민간부분의 이해당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책수립이나 제도정착에 공동의 노력을 추진함으로 인해 반부패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분의 역할강화를 통해 공공부분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패방지관련 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부패방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는 단기간내에 정착하기 어려운데 여기에는 부패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부패방지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좁게는 공직자의 부패예방 교육과 함께 넓게는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정책과 법률의 제도화를 통해 반부패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부패가 만연되면 부패제거를 위한 자원이 낭비되고 외부불경제와 같은 부의 공공재(public bads)가 형성되고 다른 정책을 왜곡하는 등 정부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제도라 볼 수 있는 부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강희복. (199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의 중요성. 「감사」, 55: 23-27.
- 고길곤 · 이보라. (2012).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405-427.
- 배정환. (200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1): 49-70.
- 서인석 · 권기현 · 이동규. (2009). 국가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 Peter Evans의 국가유형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4(4), 21-46.
- 윤광재. (2004).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3): 69-88.
- 윤태범. (2001).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 「지방정부연구」, 5(1): 71-92.
- 이영균. (2004).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37-265.
- 조선일 · 배정아. (2006).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271-296.
- 진종순 · 장지원. (2009). 정부의 규모와 부패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4(1): 29-47.
- 최영출. (2009).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 41-63.
- Bentzen, Jeanet Sinding. (2012). How Bad is Corruption? Cross-country Evidence of the Impact of Corruption on Economic Prosperity.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6(1): 167-184.
- Caiden, G. (2001). Corruption and Governance. In *Where Corruption Lives*, edited by Caiden, Gerald E. Dwivedi O. P. ; Jabbra Joseph. Connecticut: Kumarian Press. 16-37.
- Cockcroft, Laurence. (2012) *Global Corruption: Money, Power and Ethics in the Modern World*. London: I.B.Tauris.
- De Graaf, Gjalte. (2007). Causes of Corruption: Towards a Contextual Theory of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1(1): 39-86.
- Esty, D. & Porter, M. (2002).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ment: The Global Report 2001-2002*. edited by Esty, D. & Cornelius, 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4-43.
- Glaeser Edward L. & Goldin, Claudia. (2006). Corruption and reform: Introduction. In *Corruption and reform : lessons from America's economic history*. edited by

- Glaeser Edward L. & Goldin, Clau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2.
- Goel, Rajeev K. & Nelson, Michael A. (2011). Measures of corruption and determinants of US corruption. *Economics of Governance*, 12(2): 155-176.
- Halim, Nafisa. (2008). Testing Alternative Theori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1): 236-257.
- Jacoby, Neil H. et al. (1977). Bribery and extortion in world business: a study of corporate political payments abroad. N.Y.: Macmillan.
- Johnston, Michael. (2005).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averen, Jacob van. (1989).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Political Corruption*. edited by Heidenheimer, Arnold J., Johnston, Michael & LeVine, Victor T. New Jersey: New Brunswick.
- Klitgaard, Robert. (199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chan, Nick & Goodyear, Robin. (2011). Corruption: the new corporate challenge. London: Palgrave Macmillan.
- Lambsdorff, Johann, Graf. (2007).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theory, evidence, and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h, John S. T. (2001). Combating Corrup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Where Corruption Lives*, edited by Caiden, Gerald E., Dwivedi O. P. & Jabbra Joseph. Connecticut: Kumarian Press. 133-144.
- Rayp, Glenn & Van De Sijpe, Nicolas. (2007). Measuring and explaining government efficienc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3(2): 360-381.
- Schenk, Hans. (1989). Corruption... what corruption? Notes on bribery and dependency in urbai India. In *Corruption, development, and inequality: soft touch or hard graft?*. edited by Ward. Peter M. London: Routledge. 73-122.
- Uslaner, Eric M. (2008). Corruption, in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e bulging pocket makes the easy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Mark E. (2004).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328-343.
- WEF. (2007).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2008. N.Y.: Palgrave.
- Welsh H. (2004). Corruption, Growth, and the Environment: A Cross-Country Analysi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9: 663-693.

투고일자 : 2014. 09. 31

수정일자 : 2014. 12. 31

게재일자 : 2014. 12. 31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 광 재(영남대학교)

김 윤 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부패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여 왔고 향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개인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부패에 대한 연구가 다른 사회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미시적으로 부패인식지수와 정부효율성분야의 공공재정부문간의 순위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패인식수준이 높으면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다거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으면 부패인식수준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차용하기에는 곤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할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다.

주제어: 부패인식도, 국가경쟁력, 효율성, 공공재정